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최보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9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1.

발 의 자 : 최보운 · 김선교 · 서천호
강승규 · 김용태 · 서명옥
이달희 · 조배숙 · 이만희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.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.

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 신설)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소송비용의 특례) ① 국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(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)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8조의2(소송비용의 특례) ①</u> <u>국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</u> <u>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</u> <u>에서 패소한 당사자(국가기관</u> <u>및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</u> <u>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</u> <u>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)의</u> <u>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<u>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</u> <u>과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한다.</u>